

급식학교학생 신장 체중 학력 우월

비급식학생비해...결석·질병률도 크게 낮아

전남도 교육청 3년이상 실시 1백30개교 분석결과

전남도내 급식학교 학생들이 비급식 학교 학생들에 비해 신장과 체중뿐 아니라 학력면에서 단연 앞서고 결석률과 질병 발생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벽지형 급식학교가 신장발육과 체중 증가면에 있어서 농촌형과 도시형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으로 드러나 도

서벽지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전남도 교육청이 도내 1백86개 급식학교(도서 벽지형 1백43개교·농촌형 41개교·도시형 2개교) 가운데 급식실시 3년이상 경과된 1백30개교의 2-6학년 학생과 비급식학교 1백30개교 학생간의 신장및 체중, 결석률, 학력, 질병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급식학교 학생들은 비급식학교 학생보다 신장이 평균 1.6cm, 체중은 평균 1.77kg 더 앞섰으며 학력면에 있어서도 급식학교가 평균 2점 높았다.

또 결석률은 급식학교가 비급식학교에 비해 0.18% 낮았으며 질병발생률은 무려 1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신장과 체중의 향상은 도서벽지형 급식학교에서 두드러져 여학생의 경우 급식학교는 신장이 1백27.7cm에서 1백 32cm로 1년사이 평균 4.3cm가 늘어난 반면 비급식학교는 1백27.5cm에서 1백30.9cm로 3.4cm신장했으며 체중은 급식학교가 1년사이 2.5kg 늘어난 반면 비급식 학교는 1.8kg 증가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7개교를 신규 급식학교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36개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했으며 오는 97년까지는 전국민학교에 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부천 세종병원 '탈법' 자행

개설과목 무단폐쇄 등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2동 소재 부천세종병원(원장 박영관)이 병원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 처리하는가 하면 일부 진료 개설과목을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단 폐쇄하는 등 탈법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병원내 부설 주차장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건축물 무단사용및 구조변경혐의로 고발 조치한후 시정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 해의혹 마저 사고 있다.

82.3.18

정부가 오는 97년부터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한 학교급식의 재원 확보를 학부모의 부담에 크게 의존하려는 방침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영양사회(회장 조정순)와 한국영양학회(회장 채범석)가 17일 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연 '학교급식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확대 실시의 시급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에서는 큰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교육부 보통교육국 이보령 국장은 "원칙적으로 소요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급식시설 설비비용만도 3천7백60억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설비비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앞으로 신설되는 국민학교는 급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재원 지원을 이끌 계획이라고

학교급식 재원 논란

교육부 "식품비 학부모부담"

여성단체 "영세층 국고보조"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그동안 논의 수준에서만 맴돌던 학교급식 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급식시설 설치비용만은 부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식품비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이 바람직하나 농어촌이나 도시영세민층의 경우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농협중앙회 한호선 회장도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과 도서벽지에 대한 현행 급식비 보조는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동국교 최선규 교장은 "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의 부담으로 급식이 가능한 학교에는 정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으로 취약지역에서 대해서는 전액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의 신설 △영양전문 급식교사제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편 92년 현재 급식실시 현황을 보면, 급식률은 전체 국민학교의 17.4%, 전체 학생의 11.3%에 지나지 않는다.

〈인재승 기자〉

학교급식 '외부조리' 가능할까

농협센터 시범급식 계기 관심 집중 당국, 성공적일땐 적극도입 나설듯

학교 안에 독립된 급식시설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학교급식이 학교 밖에서 만들어져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해 화제다.

1시간에 5천명분의 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신 밥공장 시설을 갖춘 농협급식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중국민학교 3~6년생 1천3백명에게 따끈 따끈한 점심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첫날은 콩밥을 먹고 어제는 수수밥, 오늘은 볶음밥을 먹었어요. 수수밥은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도시락을 안들고 다녀도 되니 좋죠 뭐. 우리 엄마도 무척 좋아하던데요!”

20일 낮 12시 영중국민학교 1층 학교식당.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급식을 받던 어린이들은 새로 시작된 급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며 식판을 깨끗이 비워냈다.

영중국민학교 구연우 교장은 “급식시설을 하려면 1억~2억원 정도의 기본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농협급식센터의 이용으로 시설비 부담이 없어졌다”면서 “한 학기 동안 이용해 본 뒤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이 학교별로 급식시설·영양사·전담요원을 뒤 자체조리한다는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77년으로, 상한 급식빵을 먹고 어린이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다.

‘자체조리급식’이라는 이 원칙은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서울 영중국민학교 3~6년생들에게 ‘농협급식센터’의 밥·반찬이 시범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해 외부 급식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급식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엄청나 학교급식 확산을 막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급식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

원이 그동안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현재 전국에서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비율이 14.4%에 불과하다.

농협급식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제공하는 식사의 비용은 한끼당 1천원, 한달 2만원뿐이다. ‘콩밥·미역감자국·쥐어채볶음·닭도리탕·김치’ ‘수수밥·쇠고기무우국·감자맛살채볶음·멸치고추장조림·배추겉절이’ ‘볶음밥·계란실과국·동그랑땡·깍두기·과일’ 등 영양사가 짠 메뉴가 제공된다.

하지만 농협급식센터 같은 외부기관이 학교급식을 맡는 데 대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현재 농협급식센터는 ‘도시락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이 학교급식을 맡을 경우 다른 도시락제조업체들도 학교급식을 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측은 일단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밥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의뢰했을 뿐이며 일반 도시락업체들이 신청할 경우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도시락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도시락제조업체에 기회를 주지 않을 뚜렷한 명분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학교급식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교육부 의무교육과 정현웅 과장은 “학교급식 문제는 정부 지원을 늘려 자체 시설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우선 풀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인 농협급식센터의 학교급식 제공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부기관 이용에 대한 적극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해 성공 여부에 따라 학교급식 확산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